

# 윤석열 정부 산업 · 통상 · 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

2024. 11. 13.



산업통상자원부



## 목 차



### 1. [수출 · 외투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최대실적 달성 ..... | 1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### 2. [반도체 등 첨단산업]

|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..... | 6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
### 3. [원전 · 에너지 안보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안보 확립 ..... | 10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## 4. [지역발전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.. | 16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## 5. [통상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글로벌 통상 조치 대응 및 통상·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.. | 19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 1 (수출 · 외투) 민관 원팀코리아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

## 그간의 성과

### ① '22년 수출 역대 1위(6,836억불) → '24년 역대 최대 수출 경신 가시화

- '24.1.~10월 수출은 전년대비 9.1% 증가한 5,662억불 기록
- '23.10월 이후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, '23.6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 유지
- 러-우전쟁, 중동사태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, '24년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\* 기록 중

\* '24.1~10월 10대 수출국 및 수출증감률(WTO, %) : 1위 中(홍콩포함)(+5.5), 2위 美(+2.3), 3위 獨(△1.5), 4위 越(△5.8), 5위 伊(△1.1), 6위 日(△3.6), 7위 韓國(+9.1), 8위 佛(△2.5), 9위 墨(+2.6), 10위 캐(+0.03)

### ② 중국·미국·아세안 등 주력시장 뿐 아니라, 중남미·중동·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도 고른 플러스 성장세

- 9대 주요 시장 중 '24.1~10월 기준 7개 시장에서 수출 플러스 기록

\* '24.1~10월 기준 주력·신흥시장 수출 증감률(전년 동기 대비, %):  
(주력시장) 미국 +12.9, 중국 +7.3, 아세안 +5.3, 일본 +2.2 / EU △1.5  
(신흥시장) 중남미 +17.8, 중동 +2.9, 인도 +4.9 / CIS △11.8

### ③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빠른 대처를 통해 반도체·자동차 역대 최고 실적 기록, 방산을 새로운 수출동력화

- (반도체) HBM·DDR5 등 고부가 반도체로 생산전환 가속화 → 글로벌 시장 선도, '24.10월 누적기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1,150억불 기록

\* 반도체 수출(억불) : ('21)1,280 → ('22)1,292 → ('23)986 → ('24.1~10)1,150(+47.2%)

- (자동차) 전기차 케즘 후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대응을 통해 '24년 10월 누적기준 591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

\* 차종별 수출('24.1~10월, 억불, %) : 내연기관 392(+3.5), 하이브리드 109(+32.2), 전기차 87(△24.1)

- (방산)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노력을 결집하여, 정부 출범이후 연 평균 방산수주 규모 150억불 달성

#### ④ '23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달성,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기여

- '23년 외국인직접투자(신고기준) 327억불 연간 수치로 역대 최대, '24.1.~9.간 252억불(5.2%↑)로 역대 최대 3분기 실적 달성
- 우리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반도체·바이오·이차전지·첨단소재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유치\*

\* (반도체) AMAT, ASML, Dupont, JSR, Edward / (바이오) Merck Life Science, Sartorius / (2차전지·첨단소재) Umicore, SES, Toray / (자동차) Renault, Borg Warner / (신재생·수소) Vestas, CIP, Air Products

#### ① 추진배경

- 지정학적 불안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녹록치 않은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무역·통상 불확실성 증가, 우리 경제·산업의 어려움 지속
- 우리 경제에 기반이 되고 국내 일자리 창출, 첨단산업 생산기반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수출·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수

#### ② 추진실적

- 범정부 수출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주재 '수출전략회의('22. 11월~, 총 5회)'로 격상,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한 수출 총력대응체계 구축
- 산업부장관 주재 '수출확대 대책회의('23. 2월~, 총 8회)'를 통해 수출상황 점검과 분야별·기능별 수출지원 대책 촘촘히 수립
- 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 등 '수출현장 지원단('23. 2월~, 총 11회)'을 통해 수출과 직결되는 현장 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

▲ (종합대책) '23.2월, '24.2월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마련

▲ (분야별)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,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, 소비재 수출 활성화,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방안 등

▲ (기능별) 무역보험 확대방안,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,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등

- 해상물류·인력·인프라 등 주력산업의 수출 현장 애로 적극해소 노력
  - \* (자동차) 운반선 선령 제한 완화, 대체 운반선 확보 등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 (조선) 맞춤형 국내 인력양성, 외국인인력 등 1.4만명 공급('23년)을 통한 인력난 해소 (반도체) 클러스터 내 전력·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발표
- '24년 최대 370조원 무역금융 공급, 주요 수출 지원사업 대폭 증액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
  - \* '24년 주요기관별 무역금융 목표(조원) : 무보 263, 수은 84, 기보·신보 19, 산은 2
  - \* 코트라 지원규모('23→'24) : 수출바우처(477→567억원), 해외전시회 단체참가(241→317억원)

⇒ '23년 글로벌 교역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상황이(△7.5%) '24년 높은 증가세(10월 기준, 9.1%)로 전환되면서 '24년 역대 최대 수출 가시화

\* 글로벌 교역량 증감률(WTO, %) : ('22) +2.2 → ('23) △1.1 → ('24e) +2.7 → ('25e) +3.0

【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(단위 : 억불)】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▲ 반도체 | : ('21) 1,280 → ('22) 1,292 → ('23) 986 → ('24.1~10월) 1,150(+47.2%) |
| ▲ 자동차 | : ('21) 465 → ('22) 541 → ('23) 709 → ('24.1~10월) 591(+2.0%)        |
| ▲ 선박  | : ('21) 230 → ('22) 182 → ('23) 218 → ('24.1~10월) 200(+20.3%)       |

○ 첨단산업, 소재·부품 분야 등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다수 개선

- \* 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(0.1t→1t)
- ②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에 대해 관계사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여 R&D 센터 등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

○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국가첨단전략기술·비수도권 외투 유치 인센티브 확대 및 첨단산업 외투기업 전용 R&D 시설 등 유치 기반 확충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▲ (국가첨단전략기술)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가능 비율 상향(최대 40% → 최대 50%)  |
| ▲ (비수도권)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현금지원 국비 분비율 상향(10%p, 최대 80% 한도) |
| ▲ (첨단산업) 첨단 외투기업(주관)과 국내 산학연(참여)간 공동연구개발 사업('24년 신규)   |

○ 주요국 정상순방 계기 세일즈 외교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66.5억불 투자유치

\* '22.9월(미국), '23.1월(스위스), '23.4월(미국), '23.6월(프랑스), '23.11월(미국), '23.11월(영국)

-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대두중인 K-방산은 역대 최대 수주 달성('22년 173억불), 수주·제작 단계 금융조달, 기술개발 등 전방위 지원 강화
- 폴란드 1차방산(계약액 124억불\*)에 대해 총 100억불 규모 수출금융 제공(무보·수은 각 50억불), 수은법 개정(법정자본금 15→25조원)을 통한 지원여력 확충 등 K-방산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실시
- \* K2전차 180대(34억불), K9자주포 212문(24억불), 천무 218문(36억불), FA-50 48대(30억불)
- K9 자주포 엔진('24.9월 양산), 유도무기용 국방 반도체 등 방산 핵심 소재·부품 자립화 집중 지원
- \* AI, 반도체,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분야 60개 핵심 소재·부품 기술 도출('24.6)



### 3 향후계획

-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우리 수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노력을 지속
  - 원전·방산·플랜트 등 新수출동력 육성과 함께 한류 열풍을 활용한 K-푸드, K-뷰티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중점 지원
    - \* 농수산식품 수출(억불) : ('21) 102 → ('22) 105 → ('23) 108 → ('24.1~10월) 96( +7.6%)
    - \* 화 장 품 수출(억불) : ('21) 92 → ('22) 80 → ('23) 85 → ('24.1~10월) 84(+20.4%)
  - 통상네트워크(FTA·EPA) 확대와 연계한 신흥국 시장진출 적극 지원
    - \* FTA : GCC 타결('23.12), 과테말라 서명('24.1), UAE 서명('24.5), 필리핀 발효('24.12월말, 잠정)
    - \* EPA : 몽골 협상개시('23.12), 태국 협상개시('24.3), 세르비아 협상개시('24.9), 조지아 타결('24.11월말, 잠정)
- 우리 산업의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집중 지원 추진
  - \* '24년 예산: (현금지원) 2,000억원, (입지지원) 579억원
  - 주요 특화단지(첨단전략산업, 소부장)와 연계하여 앵커기업 수요 품목,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관련 외투 적극 유치
  -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발굴·혁신
- 첨단산업 초격차, 주력산업 대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확보 노력 지속

## 2 (반도체 등 첨단산업)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

### 그간의 성과

#### 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

- 수도권에 622조원 민간투자 기반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\* 추진 ('23.3월~) → 국가 책임으로 기반시설 구축 중

\*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 (2,102만m<sup>2</sup>), 세계 최대 생산량 (웨이퍼 770만장/月)

-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 지정\* ('23.7월), 「첨단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」 마련 ('24.3월) → 균형발전 기초 하에 지역별 첨단 Hub 조성

\* ('23.7) 반도체 (용인·평택, 구미), 이차전지 (청주, 포항, 새만금, 울산), 디스플레이 (천안·아산), ('24.6) 바이오 (인천·시흥, 춘천·홍천, 대전, 화순, 안동·포항)

#### ② 대규모 세제·금융·R&D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

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('23.3월)

- 26조원 규모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」 마련 ('24.6월)

\* 금융 지원 (18.1조원), 세액공제 연장, 재정 지원 (5조원, 3년), 기반시설 (2.4조원)

-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R&D 착수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→ AI 시대 본격 준비

#### ③ 정상외교를 통해 美·日·네 등 핵심국과 글로벌 반도체 동맹 구축

- 美·日 : 첨단 반도체 기술협력 강화, 韓-日 반도체 수출규제 현안 해소('23.7월), 韓-美-日 산업장관회의('24.6월) 등을 통한 협력

- 네덜란드 :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인력양성 교류 확대('24.2월~)

#### ④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특별법 제정

- 첨단산업 특성화대학·원 32개\* 및 업종별 아카데미 신설\*\*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투자 지속 확대\*\*\*

\* 특성화대학·원: (대학) 반도체·배터리 21개 (대학원) 반도체·배터리·디플·바이오 11개

\*\* 업종별 아카데미: '24년 반도체·배터리 아카데미 운영중, '25년 디스플레이 추가 예정

\*\*\*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: ('23년) 738억원 ('24년) 1,184억원 ('25년案) 1,497억원

-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위한 「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」 제정 ('24.1월 공포, '25.1월 시행 예정)

## ① 추진배경

-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·전략자산이며,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
- 美·日·中·EU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'총성 없는 전쟁' 진행중\*

\* 美 반도체법·IRA 제정, 日 반도체 전문기업 설립, 中 보조금 및 자국산 우선구매 등

## ② 추진실적

- 정부는 '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'를 국정과제로 채택('22.5월)하고 취임 초기부터 발빠르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
-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('23.3월)하고,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 지정, 종합대책 통해 지역별 첨단 Hub 조성

▲ (입지)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('23.7, '24.6)

\* '47년까지 717조원 투자 예정 (반도체 626.7, 이차전지 30.1, 디스플레이 17.2, 바이오 36.3)

▲ (인프라) 10조원 이상 공공기관 예타 면제, 국비 1,439억원 지원

- 역대 최고 투자세액공제,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('24.6월), 대규모 R&D, 규제 개선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

▲ (세제) '27년까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최대 25% 지원\*

\* (대기업·중견기업) 8% → 15%, (중소기업) 16% → 25%

▲ (금융) 17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\*, 1.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

\*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최대 1%p, 중소·중견 최대 1.5%p 금리 우대

▲ (R&D)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대규모 R&D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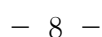
\* 첨단 패키징 ('25~'31년, 2,744억원), 미니팹 (예타 중, 9,060억원), iLED 디스플레이 ('25~'32년, 4,840억원), 차세대 배터리 ('24~'28년, 1,172억원), 전력반도체 ('24~'28년, 1,385억원)

▲ (규제) '인·허가 타임아웃제'를 도입하여 신속한 기업 투자 지원('23.7.)

- ▲ (현안해소) 美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, 한-일 수출규제 현안 해소('23.7) 등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
- ▲ (국제협력) 美('23.4), EU('23.5), 英('23.11), 네('23.12) 등 글로벌 반도체 동맹 공고화,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('23.7) 등 정상외교 통한 우리 첨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- \* 「한-미 AI반도체 혁신센터」('24.9) 개소, 「한-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」 개시('24.2) 등

- **첨단산업 특성화대학·원 32개 신설 및 업종별 아카데미 운영 등**  
첨단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산업계 주도의 인력  
양성 체계 마련을 위한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정('24.1월)

- ▲ (인재)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21개·대학원 11개 신설, 투자 지속 확대\*, 특별법\*\* 제정
- \*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 예산: ('23) 738억원 ('24) 1,184억원 ('25案) 1,497억원
- \*\* 업계가 직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▲사내대학원, ▲기업인재개발기관, ▲업종별아카데미, ▲기업의 교육과정 참여, ▲장비·시설 개방 등 제도화



### ③ 향후계획

- 17조원 저리대출 본격 시행 등 既 발표한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」을 차질없이 이행,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('24 → '27) 추진
- 「전력망법」\* 제정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, 첨단산업 정책금융 지속 확대를 통한 민간 투자 활력 제고
  - \*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신설로 갈등 관리, 인허가 특례, 주민·지자체 지원 확대 등
- 美 新정부와의 협력 강화,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('24.11월)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
- 「반도체 특별법」\* 제정 추진, 「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」 마련('24.4Q)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
  - \* 대통령 주재 반도체 특위 신설,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검토,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
- 첨단분야에 취업하는 이공계 리더급 인재 대상 특별비자 발급과 정주지원을 포함한 「K-Tech Pass」 본격화로 해외인재 1천명 유치(~'30)
  - \*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, 전세대출 규모 확대, 근로소득세 감면 등

### 3 (원전·에너지 안보)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안보 확립

#### 그간의 성과

##### 【원전】

##### ①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원전활용도 제고

- 중단되었던 원전 건설(신한울 3·4호기) 재개, 가동원전 계속운전 절차 추진, 한국형 SMR 개발 착수 등 탈원전 종식
- '24년까지 8.7조 원의 원전 일감 발주, 1조 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별 금융 지원, 세제지원 확대 등 원전 업계 지원 강화

##### ② 원전의 수출산업화 및 원전 수출기업 육성

- UAE 이후 15년만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'24.7월) 및 4조 원 규모 원전 설비 수출(이집트 엘다바, 루마니아) 달성

##### ③ 미래 유망 원전기술인 소형모듈원전(SMR) 분야 기반 구축

- 한국형 SMR 기술개발, 사업화전략 마련,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

##### 【에너지 안보】

##### ④ 「CFE 이니셔티브」를 국제사회에 확산

- CFE 이니셔티브 제안 및 국제사회 지지, 청정에너지장관회의의 작업반 출범('24.10) 등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확산 주도

##### ⑤ 원전·재생e·수소 등 무탄소전원의 공급 역량과 균형성 확보

- \* 연간 발전량 중 무탄소에너지 비중 : ('21) 33.7% → ('23) 39.1%
-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('24.5) 수립
-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('24.5),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등을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촉진

##### ⑥ 석유·가스 및 핵심광물 등 자원 비축 확대, 국내외 자원개발 촉진

-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(새만금) 신설, 동해 심해 탐사를 통한 유망 구조 발굴, 순차적 시추 추진 등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\*

\* 민관합동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발표('24.3월),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계획 발표('24.6월)

##### ⑦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구축

-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 및 종합적 위기관리 등 국가 자원안보 핵심 기반으로 「자원안보특별법」 제정('24.2)

## ① 추진배경

### 【원전】

- AI 활용, 첨단산업 육성 등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달성에 동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
 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,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
- 원전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품질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확립의 핵심 수단이며,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무탄소 전원
  - 국제사회도 원전의 가치를 재인식 중이며, 탄소중립을 위해 '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현재보다 2~3배 늘려야한다는 인식 확산
  - \* 국제에너지기구(IEA) :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 전세계 원전 설비 2배 확대 필요('22.7)
  - \* 제28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(COP28) : 주요국들은 "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선언('23.12)
- 반면, 국내 원전 산업은 지난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 중단 등으로 일감 절벽에 마주하며 위축되었던 상황

### 【에너지 안보】

- 최근 탄소중립, 에너지안보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
  -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해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, 글로벌 에너지시장도 무탄소에너지 위주로 재편
  - 중동 갈등 고조, 러-우 전쟁 장기화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에너지 수급 경쟁이 격화되어 공급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됨
- 원전, 재생e, 수소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고, 탄소중립을 달성할 필요

## ② 추진실적

### 【원전】

- 국정과제 「탈원전 정책 폐기,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」 및 「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」 이행을 위한 원전 확대,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, 수출산업화 및 유망기술 확보 등 적극적인 원전정책 추진중 ('22.5~)
- (원전 활용 확대) 탈원전으로 중단되었던 신한울 3·4호기 건설,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가동원전 계속운전 절차 등을 신속히 재개

- ▲ 신한울 3·4 실시계획승인('23.6) 및 건설허가('24.9), 신한울 1·2 종합준공 ('24.4)
- ▲ '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가동원전 10기(고리2·3·4, 한울1·2, 한빛1·2, 월성 2·3·4) 계속운전 절차 모두 개시

- (원전 생태계 복원)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던 원전기업들에게 일감 공급, 특별금융 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등 다각적 지원책 추진

- ▲ (일감) 신한울 3·4호기 일감 조기 발주 등 : ('22) 2.4 → ('23) 3 → ('24) 3.3조 원
- ▲ (금융) 원전 중소·중견기업 융자·수출보증·보험 등 : ('23) 0.5 → ('24) 1조 원
- ▲ (투자세액공제)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內 원전 제조 기술 등 확대 반영

- (수출산업화) 원전 유망 수출국 대상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및 해외원전 설비개선, 중소·중견기업 설비수출 등으로 다각화·지원

- ▲ 체코 신규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('24.7), 예상 사업비 24조원 규모
- ▲ 원전 설비·시공 수출 : 이집트 엘다바(3조 원), 루마니아 체르나보다(2,600억원), 불가리아 Kozludy 7,8호기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

- (원전 미래기술) 미래 원전기술인 SMR 분야 기술개발 본격화 및 사업화전략 마련,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

- ▲ (노형) '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' 착수·본격화 : ('23) 39 → ('24) 333억원
- ▲ (사업화) 민간 SMR 활용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'SMR 얼라이언스' 출범 ('23.7)
- ▲ (파운드리) SMR 혁신제작기술 개발 및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설 : ('24) 62억원

## 【에너지 안보】

- '23년 UN총회('23.9) 계기, 대통령 연설 통해 국제사회에 **CFE 이니셔티브**\* 제안, 10개국 및 국제기구 지지 확보,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
  - \* 원전·재생·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기업 등의 사용전력 및 산업 공정 등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추진
  - 대통령 순방 등 계기, 사우디('23.10), 英·佛·UAE('23.11), 네덜란드('23.12), 日·루마니아('24.4), 캄보디아('24.5), 체코('24.9), 필리핀('24.10) 등 10개국 지지 확보
  - IEA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개최('24.9)하였으며, 청정에너지장관 회의(CEM, '24.10)에서 글로벌 작업반 출범 및 '25년도 의장국 수임 예정
- 원전 외에도 **재생·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공급할수 있는 기반 구축**
  -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('24.5) 및 산단태양광, 해상풍력 실행계획 발표로 **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**
    - \*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('24.7),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('24.8)
  - **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**\*('24.5),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등을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촉진
    - \* 입찰을 통한 기업간 경쟁을 통해 청정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대규모 수요 창출
- **에너지 수급 위기시 대응 역량을 강화**하기 위한 노력 강화
  - 동해 심해 가스전 등 **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**\* 및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**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**('24.2)
    - \* 민관합동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발표('24.3월),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계획 발표('24.6월)
  - IEA 권고기준(90일)의 2배를 초과하는 **비축유와 법정의무량(9일)을 상회하는 가스 재고분 비축**으로 수급위기 대응
  - 첨단산업, 탄소중립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**핵심광물 비축**을 확대하고, 10대 전략 **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** 추진
    - \* 비축품목·물량 확대 : ('22) 19종 28품목, 비축 물량(주요 희소금속 13종) 41.8일분 → ('24) 20종 35품목, 비축 물량 58.9일분

## 「원전·에너지 안보 성과」

###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 개편



신원동 3호 원전(2023년 12월 준공) 건설가(24억)  
신원동 1호 원전(2023년 12월)



2023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 
가동 중인 18기 원전(2023년 12월)에  
연료교체(2023년 12월)를 계속 운전  
모드 표시

### 원전 설비재 점검·정비지원 확대



■ '24년까지 8.7조원의 원전 일감 공급

### 태국·중국과의 원전협정 대상지 선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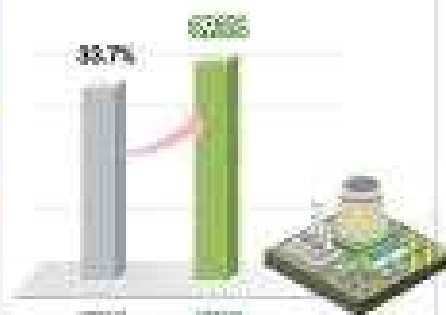
- 태국: 신규원전 사업 추진(태국정부와  
한국(2023년 12월) 24조원 규모 투자)  
- 중국: 설비·시설 수출 (태국(2023년 12월)  
한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(2023년 12월) 24조원)

### CPE Initiative 국제사업 추진



대통령 순회 특: 2023. 12월 23일  
한국-태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-중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-태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-중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-태국(2023년 12월) 24조원)  
한국-중국(2023년 12월) 24조원)

### 무형자산원 공급비율과 균형성 확보



원전 원자력 및 무형자산(2023년 12월)  
(2023년 12월) 24조원)

### 에너지·자원 부족 확대

- 석유: IEA 경고(2023년 12월) 24조원)  
중국은 24조원)  
- 가스: 2023년 12월 24조원)  
중국은 24조원)

원전(2023년 12월)

2023년 41.8% (2023년 12월)  
(2023년 12월) 24조원)

2023년 58.9% (2023년 12월)  
(2023년 12월) 24조원)

2023년 100% (2023년 12월)  
(2023년 12월) 24조원)

## 3 향후계획

### 【원전】

-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'27년까지 11조원 이상 일감 추가 발주
- 정치 환경과 무관히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「원전산업지원특별법」 제정
-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, 생태계 고도화 등 이행 계획을 반영한 「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」 수립·추진

- 체코 계약협상에 만전을 기해 '25.3월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고 추가 원전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전략 고도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

\* 체코 발주사 협상대표단 방한(11.11~22)하여 계약협상 및 현장시찰 예정

\*\*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설비·개보수 등 수출방식 다변화

## 【에너지 안보】

- 주요국과 함께 글로벌 작업반('24.10 CEM 既출범)을 통해 인증체계 등 논의 추진, 동 과정에서 국내 작업반 통해 업계 의견 수렴
- 정부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,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
- 동해 심해 가스전 등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촉진\* 및 에너지·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지속 강화
  - \*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조광제도 개선 및 해외 주요기업 투자유치 등 적극 추진
- LNG 수급·도입 안정성 제고방안 등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및 핵심자원의 종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추진

## 4 (지역발전)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

### 그간의 성과

- ① 「지방분권법」과 「균형발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정,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방시대 법·제도적 기반 마련(23.7)
- ②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'기회발전특구' 지정, 약 74조원 기업 투자  
\* (1차 지정, '24.6월) 대구, 부산, 전남, 경북, 전북, 대전, 경남, 제주,  
(2차 지정, '24.11월) 광주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
- ③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(약 3조원)  
\* '24년 상반기, 산업단지 생산 671조원, 고용 235만명 기록(최근 5년간 최대치)
- ④ 문체부, 국토부와 협업하여 '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' 수립·확정(24.9)  
- 산단 내 문화·편의·주거시설 대폭 확대로 청년 친화형 산단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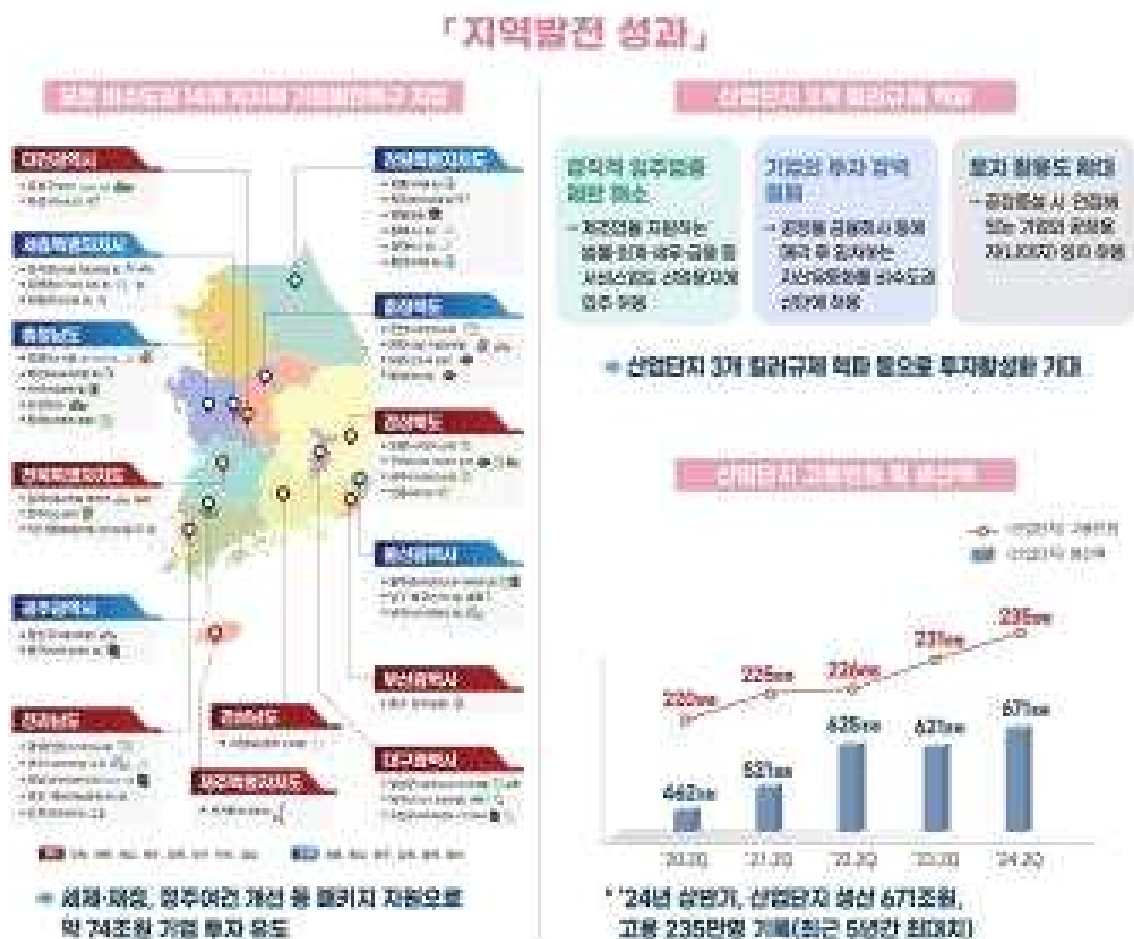
### ① 추진배경

- 지역 산업기반 약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, 청년 인력유출 가속화,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
- 수도권 집중, 지방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방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확립 추진
-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청년이 다시 모이는 문화 산단으로 대전환

### ② 추진실적

-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운영, 지방시대위원회 출범,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 지방시대 법·제도적 기반마련
-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방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를 14개 비수도권 시·도 전부에 지정하고,  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파격 인센티브 방안 발표  
\* 적용대상: (現) 중소기업/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→ (改) 중소기업/전체 중견기업  
공제한도: (現) 최대 600억원 → (改) 한도 없음

- 1차 지정 특구內 여수 呂宋LNG터미널 착공(1.4조원), 대구 미래차 부품 업체 신규 투자유치(500억원) 및 '25.1분기까지 10여개사 추가 착공 예정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한도 2배 확대('24.1, 100억→200억),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\* 확대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걸림돌 완화
  - \* 지역이전 공장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·공급('23. 4개사, 80명→'24. 20개사, 240명)
- 산단 내 불합리한 3대 킬러규제(입주업종, 토지용도, 임대·매매 제한) 혁파 등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
-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('23.8) 이후 「산업집적법」 개정·공포('24.1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24.7)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이행 완료
- 산단 내 문화·편의·주거시설 대폭 확대\*로 청년 친화형 산단조성
  - \* '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' 발표('24.9), '산리단길 프로젝트' 추진('24.4) 등



### ③ 향후계획

- 기회발전특구 조기 성과 창출 및 안착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
  -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및 관련 지원 지속 확대
  - 「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」(’24.8월 산중위 상정)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여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\* 확대
- \* 시·도가 비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규제를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 특례
- ’27년까지 문화선도산단을 10개 선정하여 브랜드산단 조성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, 산단별 민관협업체를 구성하여 자발적 문화사업 기획
-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
  - 지역산업활력펀드 확대조성(’24, 260억원→ ’25, 1,100억원),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\*,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(’25년 일몰 예정) 후속 사업 등 추진
- \* 지역산업활력펀드연계 맞춤형 인력양성, 지역앵커기업-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등

## 5 (통상) 글로벌 통상 조치 대응 및 통상·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

### 그간의 성과

#### 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, 자국 우선주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

- (美) IRA·반도체법 등 현안 적극 대응, 기업 불확실성 해소 및 기회 창출  
\* IRA 30D 보조금 수혜 차종 47개 중 34개에 우리 배터리 탑재('24.10월 기준)
- (日) 수출규제조치 해소(화이트 리스트 복귀) 및 다층적 경제협력 체제 구축
- (中) 요소 등 주요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공급망 불안요인 선제해소
- (EU) 경제입법 적극 대응 및 주요국과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
- (글로벌 사우스) 아프리카·아세안 등 핵심광물·에너지 경제안보 협력 강화

#### ② 통상·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달성

- GCC, UAE 등 5건의 통상협정 타결 등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
-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 선출('24.7월) 등 신통상 질서 주도

#### ③ 연대·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 「통상정책 로드맵」 수립·발표

- '신통상 로드맵('13년)' 이후 처음으로 통상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·발표
- ①5대 수출강국 도약, ②통상네트워크 90% 달성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통상정책 방향 제시

### ① 추진배경

- 글로벌 보호무역주의, 자국 우선주의 정책 지속 확산, 지정학적 위기 공존 등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
-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통상·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익을 수호하고 굳건한 경제안보 확립

### ② 추진실적

- 「통상정책 로드맵」 발표('24.8월)를 통해 FTA 경제운동장 확대,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개척, 신통상 규범 형성 등 통상정책 방향 제시

- 美·日·中·EU 등 주요국의 통상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핵심광물·에너지 등 분야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확대
  - (美) 반도체법·IRA 등 관련 적극 대응하여, 우리 기업의 보조금 수혜 및 수출 지원, 첨단 산업·기술 협력 확대, 對美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
  - (IRA) 어느 나라보다 신속·적극 대응한 결과 IRA 이행을 위한 가이드언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, 對美 친환경차 판매 역대 최대실적\* 달성
    - \* '23.상반기 대비 '24.상반기 對美 IRA 친환경차 수출 +45% (5만대 → 7.3만대)
  - (반도체법) 미국 內 투자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 각서 체결\*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을 적극 뒷받침
    - \* 삼성전자 64억불, SK하이닉스 4.5억불, 애플리케이션 0.75억불 규모 등
  - (수출통제) 美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, 中 內 우리기업 (삼성, SKH)은 VEU\*로 지정됨에 따라 中 내 기업활동 불확실성 완화
    - \* Validated End-User(VEU) :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,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
  - (日)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4년 만의 日 수출규제 조치 완전 해소 ('23.7월) 및 고위급·분야별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
  - 6차례 장관회의, 에너지·기후변화·수소·철강 등 분야별 채널 구축
  - (中) 공급망 핫라인('23.12월)·수출통제 대화체('24.7월) 및 FTA공동위 ('23.12월), 통상장관회의('24.9월) 등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 선제 해소
  - 요소, 흑연, 갈륨, 게르마늄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
  - (EU) 경제입법 적극 대응, 주요 유럽국(폴·영·네·체)과 포괄적 협력 강화
  - (경제입법) 배터리법, 역외보조금법 등 신규 도입한 경제규제 입법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우리기업 부담 완화
  - (글로벌 사우스)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, 중동·중앙아·아세안 순방 등 통해 핵심광물·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
    - \* (아프리카) 48개국 참여 및 핵심광물 대화 신설 등 (중동) LNG선 등 853억불 경제성과 달성 (중앙아·아세안) 핵심광물(중앙아)·핵심원자재(필리핀)·공급망(싱가포르) 파트너십 구축 등

- 세계 제1위 경제운동장 확보를 위한 촘촘한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를 통해 굳건한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
- (FTA) '23년 GCC·UAE·에콰도르·과테말라 등과 4건의 FTA 타결로 신중동분 확대, 중남미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(EPA) 핵심광물·자원·성장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신흥국가 중심으로 협력 요소를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(EPA) 본격화\*
  - \* 5건 협상 개시: 조지아('23.11), 몽골('23.12), 태국('24.3), 탄자니아('24.6), 세르비아('24.9)
- (TIPF\*) 아프리카, 중동, 중앙아, 중남미 등 권역별 유망 국가 중심으로 총 26개국과 TIPF 체결, 공급망·무역투자 협력 기반 조성
  - \* 무역·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: 법적 구속력이 없는(non-binding) 포괄적 성격의 MOU
  - \* 아프리카 10개국, 중동 4개국, 중남미 3개국, 중앙아 3개국, 유럽 6개국
- (IPEF\*) 출범 멤버('22.5)로 참여하여 필라<sup>2</sup>공급망 협정 발효('24.4) 및 이행 본격화, 필라<sup>3</sup>청정경제·필라<sup>4</sup>공정경제 서명('24.6) 후 발효 준비중
  - \* (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) 공급망·기후변화·디지털 등 대응을 위한 인도-태평양 지역 14개국으로 구성된 역내 경제협력플랫폼
- (新통상) 공급망, 디지털, 기후·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 대응 및 대외 통상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
- (공급망)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입('24.7월) 및 싱가포르와 첫 공급망파트너십 체결('24.10월)하여 공급망 교란 대비 협력 강화
- (디지털 통상) 한-싱 DPA\* 발효('23.1월), DEPA\*\* 가입('24.5월)으로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 및 글로벌 규범 정립 주도
  - \*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\*\*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(싱·뉴·칠·韓)
- (CBAM) <sup>EU</sup>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관련 對EU 아웃리치 및 국내 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CBAM 부담 최소화

## 「통상 성과」

| 1. 한미FTA협정(FTA)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인도-ASEAN 자유무역 협정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도-태평양 동맹 우주국 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b>1.1</b> 미국 내에서도 점점 생산품 증가에 따른 무역 장벽을 극복한 경우 7,500달러 보충금 지급</p> <p><b>1.2</b> <b>내수시장</b> : 상품권 전환제도, 세관보통 수출 기능, 컴퓨터 조사는 모든 항목으로 확대 확대</p> <p>* FTA 혜택을 최대 70%까지 우리 중소기업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</p> <p>* 2015년(1) 대비 2015년(1) 현재 FTA 협정국에 수출 +45% (591억 ~ 739억)</p> | <p><b>2.1</b> 미국 인도-ASEAN 협정국에 대한 지원, 특히 중소기업 내 중소기업 지원</p> <p><b>2.2</b> 우리 기업이 한국 내 생산업체의 용자 및 무역에 대한, 기술 업그레이드 기능</p> <p>* 인도-ASEAN 협정국에 대한 지원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</p> <p>* 협정국 84억, 84억(미국 45억, 협정국 0.75억) 규모로 우리</p> | <p><b>3.1</b> 인도-태평양 동맹 우주국 도약</p> <p>인도-태평양 동맹 우주국 도약, 협정국에 대한 지원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</p> <p>* JPEF 위기관리 대응팀을 통해 협정국 수출</p> <p>* 인도-태평양 동맹 우주국 도약, 협정국에 대한 지원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</p> <p>* 협정국 84억, 84억(미국 45억, 협정국 0.75억) 규모로 우리</p> |



### 3. 향후계획

-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, 對美 투자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對美 아웃리치 지속
- 신흥시장과 FTA·EPA 네트워크를 확산·고도화 및 성과 도출, 주력시장인 인도·태평양 지역 내 다층적 통상네트워크 구축 지속
  - 영국, 칠레, 아세안 등과 既체결 FTA 업그레이드 추진
- 美·日·中·EU 등 주요국과 첨단산업·공급망·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
- 자원·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 FTA·EPA·TIPF 네트워크 확산